

# 금속산별노조 건설, 현황과 과제

김승호

금속산업연맹 조사통계국장

## 1. 금속산별노조 건설 배경

금속산업연맹 안에 산별노조 건설을 둘러싸고 토론이 열띤데 진행되고 있다. 17만 5천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최대 산별연맹인 금속산업연맹의 산별노조 전환은 향후 민주노조운동 더 나아가 한국의 노동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굳이 그 근거를 들이대지 않아도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다.

금속산업연맹 내부의 산별건설 논의는 민주노총 건설을 앞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노총 건설을 앞두고 전체 금속을 하나의 단위로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업종별 단위를 통해 가입하고 이후 산별노조 건설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그것이다. 어쨌든 민주노총 건설 당시는 금속산업이 민주금속연맹, 자동차연맹, 현충련이라는 3개의 조직으로 분립되어 있었다. 민주금속연맹은 자동차 등 전략사업장 노조의 미가입, 자동차연맹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정공의 미가입, 현충련은 재벌 그룹노조의 연대체라는 점과 여전히 울산을 축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점등으로 투쟁과 조직 사업을 완결된 형태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했고, 이러한 어려움은 각 조직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상호보완성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즉 조직통합을 통하지 않고서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1997년 상반기 민



김민준/한겨레

기업별체제로는 정권과 자본, IMF로 나타나는 초국적 자본의 공세를 막아내기 힘들다는 평가는 금속산업연맹 내에서 자연스럽게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했다. 사진은 삼정투쟁에 나선 금속산업연맹 노조원들.

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3조직 통합이 권고사항으로 채택되면서 통합논의는 금속도로 진행되었고, 1998년 2월 금속산업연맹이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 IMF 위기로 인한 1998년 상반기 자본의 공세는 통합 후 조직을 재정비하기도 전에 또 다른 조직발전의 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 2. 금속산별노조 건설 논의과정

IMF 직후의 경제위기와 이를 틈탄 자본의 공세로 임금·근로조건·고용의 측면에서 10년 노동운동의 성과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기업별체제로는 정권과 자본, IMF로 나타나는 초국적 자본의 공세

를 막아내기 힘들다는 평가는 금속산업연맹 내에서 자연스럽게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했다.

이에 따라 1998년 하반기에 산별노조 건설 기획팀을 구성 금속산별노조 건설 계획 시안을 작성했고, 1999년 2월 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산별노조 건설방침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1999년 상반기 각 지역별로 산별노조 건설추진위원회(이하 산별추진위)를 구성하였고, 산별노조건설기획(초안)과 99년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작성, 9월 4일 5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제출했다. 이 대회에서는 제출된 계획을 확정하고 「초안」을 조직내 공식 토론자료로 채택하게 되었다.

제5차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산별추진위는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지역별로 산별추진위 체계를 각 단위노조로 확대·강화하는 한편 토론자료 「초안」을 중심으로 조직 내외에 토론사업을 전개했다.

산별추진위는 하반기에 진행된 현장간부 간담회, 조합원 교육, 지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모아 금속산별노조건설계획(초안)을 더욱 구체화해 12월 초 금속산별노조건설계획(2차 초안)을 단위노조 대표자수련회 및 중앙위원회 토론자료로 제출했다.

이러한 활동과정을 거쳐 2000년 1월 연맹 3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연맹 소속 전노조는 2000년 10월에 조직형태변경 규약개정을 일체히 실시하고 11월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단, 창립대의원대회의 대의원 구성방안은 금속산별노조 건설준비위원회(이하 산별준비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또한 연맹 위원장을 준비위원장으로, 각 단위노조 대표자를 준비위원으로 하는 산별준비위 구성방안과 조합원 1인당 5000원의 산별노조건설 특별기금납부를 결정했다.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물어 산별노조의 조직체계와 이에 따른 규약, 예산, 2001년 투쟁계획, 중장기 교육사업계획 등과 관련한 토론안 초안을 만들기 위해 산별소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그 성원은 단위노조에서 파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오랜 시간 치열

한 토론을 거쳐 표결 끝에 2표 차이로 내려진 것이었고, 이것은 그간의 조직 내 논쟁을 반영함과 동시에, 이후의 논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당시 토론의 주된 논점은 산별노조 건설 시점과 관련해 조직 형태 변경결의를 10월에 ‘일체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 논쟁의 배경에는 추진위활동 과정에서 제출된 조직체계나 규약 등 구체적인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내용적 접근방식의 차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었다.

### 3. 산별노조 건설을 향한 다양한 의견

어쨌든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토론안을 만들기 위한 산별소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었다. 이 소위원회는 지역본부별로 현장에서 파견하는 조합원으로 구성되었는데, 현장에서 17명이 파견되었다. 현장에서 이처럼 많은 인원이 장기간 파견된 것은 어쨌든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대의원대회 결정의 권위, 현장의 관심, 1년여 추진위활동의 결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소위원회의 임무는 추진위 활동과정에서 제출되었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제기, 토론의 결과를 집약해 조직체계, 규약, 조합비와 예산, 교육사업계획, 2000년 투쟁계획에 대한 현장토론안을 만드는 것이었다.

지난 3월 7~8일 수련회를 시작으로 한 40여일 간의 산별 소위원회의 활동의

결과는 보고서로 증집에 제출되었는데, 추진위 당시 크게 2개의 의견으로 제출되었던 것에서 형식적으로는 크게 진전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장에서 파견된 소위위원들의 집중적인 토론과 다양한 교육, 사례조사를 통해 제출된 안은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무계만으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 연맹의 사업을 놓고 현장에서 담당자를 장기파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 현장에서의 인적자원 층원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소위에서 제출된 안이 현장의 토론을 거쳐 제출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앞에서 언급한 5개 주제별로 분과를 나눠 토론을 진행했다. 소위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증집과 중앙위 토론을 거치면서 조금씩 쟁점의 내용이 수정되기도 하고, 불분명했던 부분이 조정되기도 하면서 변화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소위보고서의 내용과 7월 19일 중앙위원회에 토론자료로 제출되었던 중앙집행위원회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가장 큰 쟁점은 **현재의 단위노조를 어떤 형태로 재편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3가지로 제출된 '의견'은 지역을 기본단위로 편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① 전국시도에 지부가 걸쳐있는 대기업노조의 경우 3년 또는 산별협약 체결까지 한시적으로 기업지부를 인정, ② 기업지부는 인정하지 않 돼 대략 1만 명 이상

의 대규모 공장의 경우 공장지부를 둔다, ③ 대기업의 경우 기업별주의를 조기 해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단위 혹은 사업부별로 지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3가지로 제출되었다.

중앙위원회 토론과정에서는 지역·기업·업종단위까지 열어놓고 지부 설치문제를 토론해야 한다는 계기가 있었다. 한편 지역분부는 두지 말자는 의견이 대체로 우세했으나 지부수가 많거나 기업지부의 형태로 되면 지역분부를 설치한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둘째, 규약에서의 가장 핵심적 논의의 초점은 원칙적인 측면에서의 **권한의 집중과 현실론에 기초한 권한의 하부이양**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섭권과 쟁의권이었는데, 전자는 산별노조로 재편되면 교섭권과 쟁의권은 당연히 본조에 있으며, 따라서 쟁의행위와 관련해서는 직상급기관의 심의와 승인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후자는 지부단위의 쟁의행위는 보고나 통보사항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형식상 원칙으로 명시해야 하는 규약부분과, 내용상 협의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현실조건을 감안하면 실제 교섭과 투쟁과정에서 본조와 지부의 결합력을 어떤 방식으로 높여 나갈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셋째,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를 집중할 것인가가 주된 논의의 대상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무금과 파업기금**

25%, 본조 35%, 지부 40%의 배분안이 제출되었다. 이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는 조합비를 통일시키는 방안과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자료의 미비로 대략 통상급 기준 1%에서 1.5%의 범위에서 정하자는 의견과 낮은 수준에서 정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3가지로 제출되었다. 이 문제는 보건 의료노조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마지막 쟁점이 될 수 있다.

교육분과에서 제출한 안은 현장공동화 방지는 전 간부의 통일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으며, 2001년 투쟁방침은 일단 2002년 복

수노조와 전입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한 정세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다.

산별노조건설과 관련해 조직의 모양새를 규정하는 조직체계가 기본 쟁점이 되면서 규약도 핵심내용인 조직체계, 기관과 기구의 구성방식과 해당 기관장의 선출, 운영방식 등은 빠진 채 정리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했다.

그 외에 대의원의 구성은 200명 혹은 300명당 1명을 조합원 직선에 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제출되었고, 대의원의 역할과 기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200명이나

300명이나 하는 선출기준수의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임원구성은 ①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부위원장 2명(여성부위원장 포함) 5명 ② 위·수사, 부위원장 약간명(여성부위원장 포함) 총 7명 이내, 선출방식은 ①임원 동반출마 직선 ② 위·수



산별준비위소위원회 회의 모습.

사 동반출마, 부위원장은 개별출마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는 2가지 의견으로 제출되었다.

산별노조 건설을 둘러싸고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쟁점은 조직체계와 기관, 임원 선출, 예산배분과 조합비 통일, 교섭권과 쟁의권의 집중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

그 외에 규약의 세부내용과 규약에 따른 규정 등을 정리하려면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직의 커다란 줄기를 형성하는 내용이 정리되면 금속산업연맹의 산별노조 건설 일정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4. 이후의 전망과 과제

금속산업연맹의 산별노조 건설과정은 그 자체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실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어떤 사례도 참고할만한 것이기는 하되 절대 기준으로 설정될 수 없다. 결국 현재의 조직체계를 둘러싼 각각의 주장들에 대해서도 그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산별노조 건설은 자신을 실험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으며, 시간을 두고 형성된 주변 여건과 조직의 발전과정이라는 역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이런 점이 산별노조 건설 과정의 전통을 아프게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당위성의 실현이 멀지 않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와 다른 점은 쟁점의 형성이 연맹 대의원대의 결정사항이라는 길을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의원대의 결정사항은 지켜져야 한다는 조직내부의 분위기는 향후 금속산업연맹의 산별노조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8월말로 예정된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지역본부별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집약한 후 증집-중앙위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어 어떤 형태로든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과제는 대립되는 지점의 강조가 아니라 원칙과 방향·현실을 조화시키기 위한 조직 내 중지의 결집과 이를 통해 만들어진 '안'으로 연맹집행부-단위노조간부-각 현장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조합원을 설득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이 방법만이 17만 5천 조합원이 가진 동력과 자원을 집중시키면서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으며, 산별노조의 완성이 아닌 시작에 불과한 2000년 11월부터의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쟁점에 대해서는 치열한 토론을 하되, 토론과정에서는 보완의 문제를 고민하며, 각자의 생각만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소통되는 과정을 충실히 만들어내는 것은 산별노조 전환이라는 형식적 과정의 해결만이 아니라 이후의 조직운영과 활동, 투쟁에 있어서도 질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금속산업연맹의 산별노조 건설과정과 쟁점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단위노조 상급·대의원 간담회 자료
- 금속산별노조건설추진위원회 사업보고서
- 99년 정기대의원대회, 5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 2000년 정기대의원대회 자료, 중앙위, 중앙 집행위원회 자료 및 결과